

다산포럼

불신 받는 국가개조론



유철규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세월호 사건 이후 처음 열린 지난 4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내각 전체가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어 3일이 지나 “이번 기회에 (국가를) 개조하는 데 모든 힘을 쏟겠다”고 다시 말했다. 그리고 5월 16일 세월호 사건 유가족들과의 만남에서는 ‘국가 대(大)개조’라는 표현도 썼다.

국가를 개조하고, 국민성을 개조하고, 나라의 체질을 바꾼다는 국정 개혁과정의 구호가 제시된 것이다. ‘복지와 경제민주화’로부터 ‘규제 철폐와 경제활성화’로 국정과제가 전환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안전과 국가개조’로 반전에 또 반전을 거듭하고 있다.

“다시는 이번 일과 같은 생각이 없도록 사회의 기초부터 다시 세울” 필요성에 대

해 국민 누구나 공감할 수 있다. 부정부패, 비리를 제거하여 투명한 국가를 만들고, 공정하고 공평하며, 기회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 국민 삶의 안전을 보장하는 복지국가를 건설하자는 것이라면 반대한 국민이 없을 것이다.

복지국가를 언급하는 것은 그것이 건강과 노후라는 가장 큰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방안이고, 안전은 단순히 사전·사고에 그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의 ‘국가개조’에 대한 우려와 불신도 함께 커지고 있다. 우선 ‘국가개조’라는 용어가 갖는 역사적 기억과 의미가 문제가 된다. 1920년대 독일과 일본 우익의 국가개조운동이 결국 파시즘운동이었고, 역사적으로 모든 국가개조론은 인간개조 혹은 정신문화의 개조(정신문화 창달이라고도 불렀다)로 이어졌다.

여기서 단문제를 꼬투리잡을 여유는 없다. 다만 이번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인 국민이 왜 개조 대상이 되어야 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이 글에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실행을 위한 정책적 조치들을 취하려 할 때 보여주었던 특징이 이번에도 고스란히 반복되

고 있다는 점이다.

첫째, 정책 과제가 불가(佛家)의 화두처럼 떨어진다. 경제민주화가 그랬고, 창조경제가 그랬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현 정부 내에서 대통령을 빼고는 아무도 모른다. 장관은 열심히 받아쓰기 하고, 부처에 돌아가서 읊는다.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부처 보고서의 첫장을 그 화두로 시작한다.

국회에서 여당 국회의원들이 무슨 뜻이냐고 매번 묻는 판이었으니 공무원들이 그 화두의 실체를 잡았으리라고 믿기는 힘들다. ‘비정상적 정상화’나 ‘규제완화’ 때도 비슷했다. 각료들은 대통령의 말에 바뀔 때 따라 우르르 날뛰듯 몰려다니나 다. 대통령이 ‘투자하는 사람은 업어줘야 한다’고 하자 공단에서 투자자를 실제로 업어 주었던 경제 관료도 있었다.

이번의 ‘국가개조’도 정부 및 여당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이해의 폭을 넓힌 상태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여당에서 내각 총사퇴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청와대는 부정적이었다. 그러다가 내각 총사퇴보다 훨씬 센 ‘국가개조’라는 표현을 듣고 나왔고, 여당 내에서조차 그 내용이 무엇일까 설왕설래한다는 보도도 나왔다.

둘째, 대통령이 화두와 함께 ‘깨알지

시’도 덧붙인다. 이번에도 국무회의에서 비정상적인 관행과 봐주기식 행정, 협회와 민간 기업-퇴직 공직자-정부로 이어지는 비리의 사슬 구조를 지적했다. 국가안전체 신설도 직접 밝혔다. 나아가 여객선에 대한 안전 점검과 운항관리 규정을 개정할 것까지 세세히 지시했다.

회의가 끝나고 비서실이나 관료가 한 중요한 일이라곤 대통령 말씀을 18개 항목으로 분류하고 담당 부처를 정하는 일이었다.

셋째, 경제개혁(경제민주화 규제)에서 경제활성화(규제 철폐)로, 규제 철폐에서 국가개조(규제 신설)로 확박 바뀌는데, 이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전체를 구성하는지 알 수 없다. 그것도 이전에 세웠던 과제가 어떤 결과를 내기도 전에 “자 이제 이젠 이쯤하면 되었고...”라는 대통령 한마디에 중단된다.

이러다 보니 어떤 국정과제든 정부내에서 누가 책임지고 그것을 끝까지 추진하는지 알 수 없다. 껍데기지만 국가개조라는 말을 안전한 복지국가를 만들자는 말로 해석해 보더라도, 조변석개(朝變夕改)하는 기존의 국정과제 패턴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고 있다면, 앞으로 내가 좀 더 안전해지겠구나라고 느낄 국민은 거의 없어 보인다.

NGO 칼럼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에서 푸른길을 생각하다



이경희 푸른길 사무국장 이경희

지난 연휴 가족들과 함께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을 찾았다.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길이라는 명성처럼 많은 이들이 가족, 연인, 친구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었다. 지금은 아름답기 그치지 않고 메타세쿼이아는 불과 40여년 전인 지난 1970년에 2~3년생의 작은 묘목을 식재한 것이라는데, 역시 시간은 우리에게 좋은 장소들을 만들어주는 힘이 있나보다. 그 명성만큼이나 이 길의 가치는 문화재급이라 할 수 있을 것 같다. 얼마 전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문화재지정’을 제안하였는데, 그 근거로는 담양 메타세쿼이아 길이 갖고 있는 경관의 가치와 의미에 바탕을 두고 있을 것이다.

담양의 메타세쿼이아길처럼 광주를 대표하는 길이 있다. 광주역에서 옛 남광주

역, 광주대학교까지 8km에 이르는 길다란 숲길, 푸른길 공원이다. 광주 동구와 남구, 그리고 10여개 동네를 잇는 이 길은 광주와 여수를 잇는 옛 기차길의 역할이 끝난 후 만들어졌다. 기차길의 폐선이 결정된 이후 광주를 대표하는 숲길을 만들자는 지역주민, 시민들의 열망에 따라 광주시는 폐선부지 위에 푸른길을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시민들은 이 길을 만드는 데 작은 힘이라도 보태기 위해 현수기금을 모았고 매년 봄, 가을철이면 시민들이 ‘내 나무’ 한 그루씩을 푸른길에 정식껏 심어 숲을 만들어왔다.

시민이 결정하고 조성한 도시숲길, 시민과 행정이 협치를 통해 완성한 푸른길 공원은 전국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다. 폐선부지가 발생한 지역에서는 광주 푸른길의 사례를 배우기 위해 광주를 찾아오고, 그 결과 전국 각지의 폐선부지는 광주 푸른길을 따라 공원 혹은 자전거 길로 결정되고 조성되고 있다. 그런데 푸른길 공원이 다시 철길이 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4월, 광주시는 도시철도 2호선의 건설을 위해 백운광장과 조대치대병원 앞까지의 푸른길을 이용할 것이라 했다. 다른 구간은 대부분 도로 중앙선을 따라 도시철도 2호선이 건설되는데 반해 이 구

간에서는 푸른길 공원을 파헤치고 2호선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운행되는 도시철도 1호선은 지하 3층 이상의 깊이에 건설되었는데 이와 다르게 도시철도 2호선은 저심도 방식으로 건설된다. 이 저심도 방식은 지하1층 깊이로 땅을 파내고 이곳에 선로를 설치하는데 그러다보니 지상에 있는 푸른길의 나무들은 모두 베어지거나 옮겨지고, 공사가 끝난 후에도 콘크리트 타일위에 얇게 쌓인 흙바닥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환경으로 변질된다.

더불어 도시철도 2호선의 푸른길의 훼손은 일부구간에 한정된 것이 아닌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백운광장과 조대치대까지의 푸른길 공원은 전체 푸른길 중 유일하게 큰 도로와 접하는 구간이며, 전체 푸른길의 가운데에 해당하는 위치이다. 특히 이 구간에는 푸른길의 역사, 문화, 생태적 거점공간인 남광주 구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의 훼손은 푸른길 전체의 가치와 의미, 기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이 구간은 푸른길공원 조성 초기인 2003년~2005년 조성된 길로, 푸른길이 자칫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인해 방치되는 것을 우려한 지역기업, 시민들의 현수기금과 기탁으로 만

들어졌기에 시민참여, 민간 거버넌스를 대표하는 공간이다. 철거되어버린 남광주역의 흔적인 남광주철교의 교각과 철로가 남겨진 역사적 공간이기도 하다.

도시숲길 푸른길의 역사와 가치는 광주 시민들의 노력이 낳은 결과이며, 길다란 도시숲길 푸른길의 이야기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물려줄 소중한 보물이 될 것이다. 과거처럼 도시의 숲을 비어있는 공간으로, 공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해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식하는 아반의 시대는 지났다. 이제는 도시의 역사와 의미를 담고 있는 녹지를 보전하기 위한 대안들이 모색되고 적용되어야 한다.

10여년 전 담양의 메타세쿼이아 길이 도로 확장 공사로 인해 사라질 위기에 처했을 때 많은 이들이 국도의 선형 변경을 요구했고 그 뜻이 받아들여진 결과 지금의 담양가로수길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때 도로공사의 편리를 위해 나무를 베어 버리는 아반의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었다면 지금의 우리는 가로수길을 걸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로부터 10여년 훨씬 지난 지금, 광주의 푸른길은 아직도 아반적 행정과 아반적 토목공사에 맞서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기 고

다문화여성 취업, 그들만의 숙제인가요?



이미심 광주전남다문화취업지원센터 직업상담사

#1. 필리핀 출신 다문화가정여성 M(29)씨는 한국에 온 지 만 2년째다. 남편과의 사이에서 둘 자녀가 있다. 필리핀에서 컴퓨터 관련 전공으로 칼리지를 졸업했고 본국외에 주변 동남아 국가에서 호텔 관련 일을 한 경력도 있다. 이만한 학력과 경력이라면 ‘아무 일이나’ 하는건 어렵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M은 이른바 취업 취약계층이다. 본인의 자원과 능력이 한국인 못지 않지만 외모와 언어가 다른데서 오는 독특한 취업에서 취약점으로 작용한다. M의 첫 직장은 세탁공장이었다. 나이가 젊고 같은 처지의 다문화여성들이 있

어 일할만했는데 공장도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가야하는데다, 아이를 돌봐주던 친정어머니마저 필리핀으로 돌아가야 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었다. 통근거리와 육아부담이라는 이중고를 한꺼번에 떠안게 되면서 할 수 없이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통근거리가 길어지면서 생기는 부담은 감내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그것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고종이였다. 원거리의 직장에 출퇴근하려면 아이를 더 일찍부터 더 늦게까지 맡겨야하는데 그 조건에 맞는 어린이집이 없었다.

정부가 여성이 일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해 각종 제도 마련을 고민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일-가정 병립이 불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는 너무나 흔하다. 사정이 이러므로 M은 일 찾는 것을 포기하고 육아에만 전념해야 할까. 육아를 위해 일을 포기하는 것은 개인사정이고 일을 하려면 가정을 희생해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운다면 할말이 없다. 그러나 이런저런 것을 떠나 M은 ‘일 해야 하는 엄마’ 입장. 이는 그저 개인사정에 의해 어느 쪽만 골라잡아야 하는 ‘양면의 선

택’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따지고보면 세상에 개인사정 아닌 일이 어디 있던 말인가.

#2. 중국출신 결혼이민자 여성 J(23)씨, 아직 어린 나이인데다 본국에 매월 일 정액을 송금해야 하는 입장이라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았다. 그래서인지 임금 정보에 민감해서 업체와의 친의는 고려하지 않고 이업체 저업체를 전전하느라 한국의 직장문화이해같은 건 남의나라 일이다.

필자는 고용노동부 지정 광주·전남다문화취업지원센터에서 직업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취업의지와 필요성을 가진 다문화여성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 최적화된 조건으로 구직자와 구인업체를 매칭하는 것이 본연의 주요업무다. 그런데 근로조건 불일치로 취업육구가 총족되지 못할 때 매우 안타깝다.

앞서의 사례에서 봤듯이 M이나 J 모두 취업의지는 강하나 개인사정으로 치부되는 근무시간과 거리등 조건이 맞지 않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구직자나 구인업체 모두에게 마인드의 유연함이 아쉽던 차에 동행면접 등 취업을 위한 노

력이 결실을 맺어 직장을 구할 수 있었다. 구직자는 자신의 근무희망조건을 약간 수정하는 유연성으로, 구인업체는 구직자의 자원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서로가 원하는 것을 얻은 것이다.

20일은 ‘세계인의 날’이다. ‘세계가 하나’임이 구호가 아닌 일상이 된 지금,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 수가 150만명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광주에 거주하는 다문화여성의 수는 5000여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들 중 다수의 여성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일하기를 원한다. 그럼에도 구인업체가 생명의 양보없는 근로조건 교수로 구직구인난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외국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는 분명 비하와 차별, 오해와 무시가 없다고 할 수 없다. 더불어 우리 이웃으로서의 다문화여성을 바라보는 시각이 지나치게 편견에 사로잡혀있음을 반성해야 한다. 다문화여성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노동자 원임을 인식하고 그들의 노동력을 활용함에 있어 구인업체의 유연한 대응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다.

社說

대통령 공식 사과, 그 진정성은 인사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34일째인 19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공식 사과했다.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직접 머리를 숙인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을 대통령인 저에게 있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고 말했다. 세월호 사고 발생 이후 5번째 사과다. 그동안 ‘각각사과’, ‘간접사과’라는 비판 여론 속에 민심에 떠밀려 나온 사과라는 점에서 쓸쓸함을 금할 수 없다.

박 대통령은 또 담화에서 슬한 문제점을 내보인 해경의 해체를 비롯해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 개편, ‘관피아’ 해파 및 공무원 조직 수술, 국가안전체 신설, 참사 당일인 4월 16일의 ‘국민안전의 날’ 지정 등 대대적인 개혁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세월호 참사에 대한 특검 가능성도 열어놓았고, 여야와 민

간 참여의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도 제안했다.

대통령으로서 참사 책임을 통감하고, 정부 조직의 전면 쇄신과 개혁 방안을 국민 앞에 약속한 데 대해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하지만 박 대통령 자신의 국정운영방식 개선과 내각 총사퇴 등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빠졌다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박근혜 정부 1기” 인사는 이른바 수습인사에서 비롯된 감각이 인사, 낙하산에 따른 무능력 인사, 특정지역 편향 인사 등으로 인해 국정 혼신과 난맥으로 이어진 게 사실이다. 따라서 내각의 전면 개편이란 전체하에 능력과 전문성 중시의 인사를 단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혁신적인 내각 개편을 하려면 민심을 따르는 게 순리다. 일련의 개혁안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선 인물을 우선 시하고, 지금과 같은 일방통행식이 아닌 쌍방소통의 국가 운영시스템을 정착시켜야 한다.

반인륜적 ‘일베’ 사이트 왜 폐쇄 안하는가

5·18 왜곡과 호남 비하로 인한 지역 감정 조장,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서까지 반인륜적인 글로 지탄의 대상이 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게시물이 일단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베의 적폐를 재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이 방통심의위로부터 받은 ‘세월호 참사 관련 일간베스트 심의 현황’ 자료를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일베 회원들은 세월호 참사 유족들에 대해 ‘유족충’이라 부르는 등 만행을 저질렀다.

심지어 희생생 여학생과 여교사를 소재로 음란성 게시물을 올려 과연 그들이 정상적인 의식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의심케 했다. 따라서 일베의 게시물 131건을 삭제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방통심의위는 이같은 내용 외에도 지난 2011년 이후 올 3월까지 일베에

올라온 1610건의 게시물을 내리도록 감정 조장, 그리고 세월호 참사와 관련 해서까지 반인륜적인 글로 지탄의 대상이 된 ‘일간베스트 저장소’(일베)의 게시물이 일단 삭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베의 적폐를 재증명하는 것이다. 그러나 당국의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일베에 유해 게시물이 폭증하고 있음에도 ‘성인계시판’에 대해서만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했다. 또 ‘청소년 보호 활동강화’ 조항 조치가 그쳤을 뿐이다.

일베의 일탈행위는 심각한 범죄다. 5·18과 정라도 궤를 넘어 세월호 피해자까지 욕보이는 일베는 국가경쟁력을 해치는 ‘공공의 적’이다. 당국의 민회화를 해치는 일베에 대해 엄정하고 항구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청소년 유해매체물(19급 사이트) 지정과 사이트 폐쇄 등 강력한 조치를 단행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이따금 포털 사이트에서 재미로 동명이인(同名異人)을 검색해본다. 그러면 비록 지역이나 나이 차가 나긴 하지만 같은 이름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많은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필자가 쓴 기사나 취미활동으로 동호회 카페에 올린 글과 사진이 먼저 검색되는 물론이다.

그렇지만 인터넷에 올린 내용이 항상 유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탈린 트나 스포츠 스타처럼 유명인이 아닐지라도 누구든지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 주변에 알리고 싶지 않은 내용을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가 인정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사 한국 현실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국내 포털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만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6·4 지방선거가 불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등록과 함께 ‘지역일꾼’을 자임하며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들고 선거에 나선 이들의 재산과 병역관계, 납세, 범죄전과 등이 속속들이 인터넷상에 공개됐다. 이 가운데 옥석(玉石)을 가리는 일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잊혀질 권리

인터넷 공간에서 자신과 관련된 기록을 삭제할 수 있는 개인의 권리를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라고 한다.

최근 인터넷에서 ‘잊혀질 권리’가 인정됐다는 소식이다.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인터넷에서 개인의 ‘잊혀질 권리’를 인정하는 판결을 처음으로 내린 것이다.

유럽사법재판소는 “구글 검색엔진을 이용하는 모든 사람은 검색에서 ‘잊혀질 권리’를 갖고 있다. 구글은 사용자가 시효가 지나고 부적절한 개인정보를 지워달라고 요구할 때 이를 삭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사 한국 현실에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국내 포털에서도 어느 정도 수용할 만 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한다.

6·4 지방선거가 불과 앞으로 다가왔다. 후보등록과 함께 ‘지역일꾼’을 자임하며 지역발전의 청사진을 들고 선거에 나선 이들의 재산과 병역관계, 납세, 범죄전과 등이 속속들이 인터넷상에 공개됐다. 이 가운데 옥석(玉石)을 가리는 일은 유권자들의 몫이다.

/송기동 사회2부장 song@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지)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편집부 2200-642 (대표 FAX 222-4918) 사 회 부 2200-663 (대표 FAX 222-4267)	경 제 부 2200-632 문화생활부 2200-661 여론매체부 2200-696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매체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02-773-9331)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독자투고·기고 독자투고와 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교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